



주간 통일정세

2013-2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기계공장 시찰... "현대적 기계 생산" 독려(6/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허철용이 사임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현실에서 큰 은(보람있는) 결과를 나타내며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자재보장 대책을 바로세우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 히틀러 '나의 투쟁' 고위간부에 선물(6/18, 워싱턴포스트)**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탈북자들이 만드는 북한 관련 뉴스매체인 '뉴 포커스'를 인용해 김 제 1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인 1월 8일을 맞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급 간부들에게 하사한 선물 가운데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생일 선물로 '나의 투쟁'을 택한 이유는 나치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추진한 경제, 군사적 재건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경제·핵 건설 병진에 黨사업 집중해야"(6/18, 연합뉴스)**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최태복 비서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의 노동당 사업 시작 4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관철에 당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최 비서는 "인민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의 생산성과를 추구하고'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며 우주정복의 성과를 확대해 우리 힘으로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비행사를 하늘의 결사대로 준비시키라"(6/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항공·반항공군 제 1017부대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조종사들의 이착륙·공중전투 훈련 등을 참



관하며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해 비행사(조종사)들을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시키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협동농장 첫 시찰…온실 채소생산 독려(6/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송학협동농장 채소온실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온실을 둘러보며 "중앙에서 도, 시, 군들에 건설할 표준화된 온실 설계를 내려보내주며 도, 시, 군들 사이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 대책도 따라세워야 한다"며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지도서를 만들어 모든 온실에 보급하며 온실들에서는 그에 맞게 남새 재배를 과학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마식령스키장 건설 총력…"유럽 전문가도 방문"(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글에서 "얼마전 건설장을 찾았던 유럽의 전문가들은 스키장 건설이 올해 안으로 완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해낼 수 있는가하고 거듭거듭 물었다" 전함.
 - 신문은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방대한 대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다는 사실이 그들(유럽 전문가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고 밝힘.
- **북한TV, 탈북청소년 좌담회 방영…'말끔한 모습'(6/21,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20일 진행된 탈북 청소년들의 좌담회를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26분간 녹화 중계함.
 - 탈북 청소년 9명은 여성 사회자의 요청으로 북한에서 중국 단둥으로 가게 된 과정과 라오스 생활 등을 차분하게 설명함.
- **北 김정은, 자강도 군수공장 현지지도(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트락뜨르(트랙터)종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이 우리나라 기계제작 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공장을 대단히 중시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애정이 각별했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이 혁명사적관을 잘 만들어 교양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며칠 전에 돌아보며 비판한 공장과는 완전히 대조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기계공장 시찰…"국제 동향 파악 습득하라"(6/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에서 가장 먼저 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강계정밀기계공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손길 아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한 공장으로 됐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생산에서 양적 지표 못지않게 질 보장 문제가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발전된 정밀기계계의 기술적 지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것을 압도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함.

■ 김정은동향

- 6/17,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임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6.17,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최취·박태성·홍영철·손철주·윤동현 동행
- 6/18,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인민대학습당 편집원 등에게 감사 전달(6.18, 중방)
- 6/19,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오중흙7연대 칭호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현지지도(6.19, 중통·중방)
 - 최룡해, 윤동현, 홍영철 동행 및 리병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현지영접
- 6/20, 김정은 黨 제1비서, 안주시(平南)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시찰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6.2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박태성·김영남(평안남도黨 비서) 동행
- 6/22,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6.22, 중통)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철, 윤동현, 박정천, 김택구, 류영섭(자강도 당책) 동행
- 6/23, 김정은 黨 제1비서,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6.23, 중통·중·평방)
 - 최룡해·박태성·강관일·황병서·홍영철·윤동현·박정천·김택구·류영섭(자강도黨 책임 비서)·김춘섭(道黨 비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 요해(6.19, 중방·중통)

나. 경제

○ 北, 올해부터 林農복합경영 지역 확대(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환경과 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임업·농업 복합경영을 올해부터 전역에 본격 도



입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북한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사의 김광주 상급고문은 17일 '사막화 저지를 위한 세계의 날'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임농복합경영 방법이 각지에 도입된다며 이 기술 도입으로 현재까지 10만 정보의 산림 면적이 늘어났다고 밝힘.

다. 군사

- **北, 신형탱크 900여대 전력화...'선군호' 개발 첫 확인(6/20,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이 "북한군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신형 전차 900여대를 전력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우리 육군이 전력화한 전차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추가 배치된 북한군의 신형 전차는 '선군호', '천마호'(천마5호)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번에 개발 및 전력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선군호'는 기존 전차 포탑을 개량해 사거리가 길고 전차 속도도 시속 70km가량으로 기동력이 뛰어나 우리 기갑부대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 인민무력부, 6.20 반미공동투쟁월간(6.25~27) 즈음 駐北 무관단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6.20, 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북한도 '장마주의보'... "미리 수해대책 세워라"(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 실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미리 막고 생산과 건설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산업시설과 건물, 원료와 연료, 설비와 자재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장마철에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며 생산 현장별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
- **北 영유아, 만성 영양불량 상태...1990년대보단 개선(6/2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1990년대 후반보다는 향상됐으나 여전히 만성 영양불량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이수경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영양 및 2013년 식량 상황 토론회'에서 유엔기구의 2012 북한 영양 상태 보고서를 분석, 이같이 밝힘.



- **북한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종합)(6/23, 연합뉴스)**
 - 북한의 개성 일대에 집중된 고려시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유네스코는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계속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북한이 등재 신청한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심사한 결과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함.

- **北 "지방 설치 경제개발구서 토지 최고 50년간 임대"(6/23, 연합뉴스; 통일신보)**
 - 북한이 앞으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뉴스가 23일 확인한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6월 15일자)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 준공식, 6.20 최태복·장철(국가과학원장, 준공사) 등 참가下 진행(6.20, 중통·중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한 식량부족, 더는 위기상황 아닌 듯(6/17,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초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많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중반 현재,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보고서는 다만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부족과 성장 지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하나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제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김계관 19일 中외교부부장과 회담(6/17,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관 북



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1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과 양국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화 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 진행은 양국 사이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쌍방은 양자 관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을 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깊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함.
- **몽골 에너지기업, 북한 정유회사 지분 인수(6/17, 연합뉴스)**
 -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석유회사 'HB오일 JSC'는 17일 북한 정부 소유의 정유회사인 '승리'(Sungri)의 지분 2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김영남, 로하니 이란 신임 대통령에 축전(6/1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하산 로하니 신임 이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간의 지속적인 친선·협력을 강조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함.
- **시진핑, 北 김정은에 답전... "한반도 평화 공동 수호"(6/18,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8일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시 주석은 "나는 중조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친선을 중시하고 전략적인 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 당과 정부와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에 따라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며 친선적으로 협조해 중조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밝힘.
- **어나니머스, 北 미사일 문서 25일 공개 시사(6/19, 연합뉴스)**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오는 25일로 예고한 북한 인터넷망 공격을 앞두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북한 내부의 군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어나니머스는 지난 17일 유튜브에 'Anonymous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북한의 주요 미사일 문서와 주민문서, 군 관련 문서는 이미 훤히 내려다보인다"며 "이것을 세계에 일부만 공개할 것"이라면서 "당신들이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6월25일을 기해 당신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고 말함.

- **스위스, 북한 임농복합경영에 96만 달러 지원(6/2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임농복합경영' 사업에 스위스 정부기구인 스위스개발협력처(SDC)가 향후 2년간 96만달러(약 11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유엔 "전세계 탈북 난민 1천100명"(6/21, 미국의소리(VOA))**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9일 발표한 '2012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가 전 세계적으로 1천110명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난민기구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외국에 사는 탈북자 수가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신선호 北유엔대사 기자회견 발언문 요약(6/21, 연합뉴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밝힘.
 - 전날 갑자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 것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신 대사는 회견이 끝나고 브리핑룸에서 나가면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남한 측에서 무산된 남북대화와 관련해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말함.

- **北여성,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선출(종합)(6/22, 연합뉴스)**
 - 북한 여성 체육인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북한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6월1일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북한의 한은경이 집행위원으로 뽑힘.

- **어나니머스 "예고대로 25일 정오 북한 사이트 공격"(종합2보)**
 -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의 일원이라고 밝힌 해커가 6·25전쟁 발발일에 맞춰 예고대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공격을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어나니머스 소속이라고 밝힌 한 해커(트위터 ID : @Anonsj)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예고했던 것처럼 이달 25일 낮 12시(그리니치표준시 3시)에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 구국전선 등 46개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中, 6.19 베이징에서 '외교부문 전략대화' 진행 및 '친선협조관계 더욱 발전 및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의견교환' 보도(6.19, 중통·중방)
- 유엔의 일본 정부에 '하시모토'(유신회 공동대표) 발언(일본군 성노예 필요) '시정 권고' 강조 및 "역사왜곡과 미화분식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며, 일본의 우익화·반동화의 길로 줄달음" 우려(6.19, 중통·민주조선)
- 김계관 北 외무성 제1부상, 6.21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 및 '왕이' 외교부장과 각각 면담 및 6.22 귀환(6.22,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없는 세계' 내세우며 미국 핵정책 비난(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핵무기 감축 및 폐기를 주창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핵무기 없는 세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미국의 '안하무인'적인 핵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 핵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함.

● 반기문 "어떤 북미대화도 한반도 비핵화가 초점"(6/18, 연합뉴스)

- 에두아르도 델 부에이 유엔 부대변인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김계관 "6자회담 등 대화로 核해결 원해"(6/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중 외교 당국 간 첫 전략대화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조선반



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부상과 전략대화에 나선 장예쑤이(張業蓀)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유엔, '핵실험' 北 기관4곳·개인8명 추가 제재 논의(6/20, 연합뉴스)
 - 유엔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을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장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산하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내주 공개하고 이르면 7월 제재 확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제재대상자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유출 등에 관련된 외국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중국과기대, 북한 3차 핵실험 지점·위력 확정(6/20, 중국신문사)
 - 중국의 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관인 국립 중국과학원 부설 중국과학기술대가 북한이 지난 2월 감행한 제3차 핵실험의 지점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위 41도 17분 26.88초, 동경 129도 4분 34.68초로 확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함.
 - 또한 중국과기대 지진실험실 연구팀은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2.2kt으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의 위력(16kt)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함.
- 중국, 6자회담 당사국에 "대화·접촉 시급하다"(6/20,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화 대변인은 "최근 반도에 나타난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국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며 당사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9개국(6/21,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결의안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6월 5일) 안으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



트에 따르면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벨기에, 그리스, 카타르 등 9개국에 불과함.

● 北 김계관, 방중 마치고 귀환(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또 김 제1부상이 방중 기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각각 만났다고 밝혔으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전하지 않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라오스 탈북자 18명 입국 비난... "주범은 청와대"(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라오스에서 탈북자 18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사실을 비난하면서 "유인납치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청와대와 현지 괴뢰(한국) 대사관까지 가담해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그들에게는 북남관계 개선의사가 조금도 없고 대결적 흥심만 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밝힘.

● 南 당국은 화해·통일의 길로 나와야(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민족단합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민족단합을 강조하며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 당국 대화가 파탄된 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을 위한 입장에서 서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북남 관계 발전을 저애(방해)할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힘.

● 北 대남실세 김원수, 6·15북측위원장에 선출(6/18, 민족통신)

-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18일 "6·15 북측위는 15일 총회를 진행해 김원수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6·15 북측위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고 밝힘.

● 北 "최고존엄·체제 비방 탈북자 제거할 것" 위협(6/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는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



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인민보안부는 "이지들(탈북자들)을 내세워 우리에게 대한 모략선전과 비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 악질적인 보수언론매체들도 무자비한 정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송 탈북 청소년 좌담회로 첫 공개활동(6/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라오스에서 자국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을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린 좌담회 내용을 전함.
- 통신은 이 청소년들이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뻔한 자기들을 한 품에 안아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진정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라면서 납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에 안긴 소감을 밝혔다. 전함.

● 北, 6·25 앞두고 '미국의 전쟁 책임' 집중 부각(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조선전쟁 비화-전쟁도발자의 정체를 밝가본다(1)'는 글에서 미국이 6·25전쟁 발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해방 이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려고 남한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 등을 언급하고 "미국은 1945년 9월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전 조선을 지배할 야망 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세밀히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 통일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여전히 유효"(종합)(6/21, 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해 둔 실무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北매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거둬 요구(6/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중대 결단' 기자회견과 관련, 정부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라고 거둬 요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자회견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개성공업지구 방문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또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남조선 기업가들의 설비점검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비롯해 앞으로 공업지구가 정상



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南北종교인 베이징 회동...北측 "대화 재개 희망"(6/18, 연합뉴스)

- 북한 종교계 인사들이 최근 우리 측 종교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종교단체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KCR) 장재언 회장 등 KCR 인사들을 만난 국내 7대 종단 종교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변진홍 사무총장은 북측 인사들도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북측이 남북 간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려는 뜻은 확고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대통령께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6.17)시 '한국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약 70%가 북침이라고)' 발언 관련 '미국의 무력침공을 합리화하려는 또 하나의 민족반역행위', '외세 의존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동'이라며 '북침전쟁이었다'고 왜곡 주장(6.20,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6자회담 당사국에 "대화·접촉 시급하다">(6/20, 연합뉴스)
 - 중국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음.
 - 이는 북한의 계속된 '대화 공세'에 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나온 반응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최근 반도에 나타난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통 노력의 결과로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화 대변인은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국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면서 당사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이 최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를 발표, 비핵화 의제를 포함한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자 중국은 이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규정하고 각 당사국 사이의 대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은 전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1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음.
 - 한편 화 대변인은 19일 다렌으로 향한 김 제1부상이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김 제1부상은 어제 열린 전략대화 외에도 앞으로 중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를 만나고 조선(북한)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전날까지 장 상무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김 제1부상이 왕 부장 또는 양제츠 외교 당국 국무위원을 예방할 것으로 점치고 있음.
 - 그러나 화 대변인은 김 제1부상이 다렌을 왜 방문했느냐는 물음에는 "그



와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음.

- 김 제1부상은 이날 북중 무역 거점 가운데 한 곳인 다롄항을 방문,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미·일 "2.29합의보다 강한 비핵화해야">(6/2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화제외와 관련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음.
- 3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음.
-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지난해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리나라농축산물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 공세를 한 만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응은 물론 최근 '조속한 대화의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 이날 3국 회담에는 본부장과 미국의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음.
- 미국 국무부는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국무부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도 재확인했음.
-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야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등의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긍정적 형세를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면서 대화도 촉구하고 있어 비핵화 사전조치라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한·미·일과 입장차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음.
 - 대화 공세로 돌아선 북한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도 관건. 비핵화 대화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북한이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시를 해야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임.
 - 한 정부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도발 등 판 짓을 하지 않고 대화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면 비핵화 회담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면 6자 회담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조건 탐색은 내달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6자회담국 외교 수장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ARF까지는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차원의 행보가 이어진 후 7월부터는 그때까지 각국이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맞춰보는 2라운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임.
 - 다만 한미 양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개념이 이전과 다른데다 권력 재편을 마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 판짜기 수준의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현재 6자회담이 재개 국면으로 준비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서로 최대한 맞춰 그 정도면 한번 만나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만남이 되려면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미국에 회담 제의 속내는?>(6/16,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이 16일(일)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음.
- 북한은 한국과의 회담을 철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방위원회 중대담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음.
-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회담 내용에 상호간 비핵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핵무기 구축을 위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되풀이했음.
- 미 국무부는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늦게 나온 북한의 회담 제의에



-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금요일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외교적 돌파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이전 약속들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08년까지 지속된 6자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야망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올 초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며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고가는 동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음.
 - 그 때 이후 북한은 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핵 원자료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무기용 우라늄 농축에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기 위해 핵무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정권 존속을 보장받고 지원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비축하려 한다고 설명
 - 올 3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음.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그 정도의 핵능력을 갖추진 못했다고 보고 있음. 북한은 소형 핵폭탄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중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통제하기 위해 다자회담 재개를 촉구해왔음.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중국 관리들은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미국 관리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함.
 - 미국은 지난해 2월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실험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는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격 취소됐음.
 - 지난해 말 북한이 또 한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올 2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음. 북한은 대미 위협을 이어가는 한편 자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했음.
 - 당초 개성공단 조업 재개 등 남북한 협력 프로젝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지난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석 대표의 급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무산됐음.
- <백악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위해...행동 먼저">(6/17, 연합뉴스)
- 미국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해 대화를 우선시하지만,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항상 대화를 선호하며, 사실 북한과 공개적인 소통 라인이 있다"고 밝혔다.



- 북미 간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일컫는 것임. 헤이든 대변인은 이어 "우리(미국)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데니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며 과거에도 대화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 맥도너 실장은 "그러나 대화는 실질적이어야 한다. 북한은 확산, 핵무기, 밀수, 기타 문제를 포함해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에 바탕을 뒀야 한다"며 "따라서 미국은 어제 북한이 한 그럴 듯한 말(nice words)보다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분명한 점은 북한이 번지르르한 말로 전통적인 두 동맹국인 러시아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지를 받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 두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이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임.
- 남북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따라서 미국이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를 '태도 변화'로 인정해 대화나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9일 워싱턴DC에서 회동함.
- 한·미·일 3개국 6자 회담 수석대표의 만남은 6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임.
- 북한이 북미 간 대화를 제의하기 전에 마련된 자리이지만, 자연스럽게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18일 한·미, 미·일 양자 협의를 하고 나서 19일 3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임. 국무부는 이번 회동과 관련해 "3국 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3국의 공동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 <미 국방부 핵운용전략 보고서 '북 핵 정당성 인정 못해'(6/23, 미국의소리)>

- 미국 국방부가 핵 운용 전략에 관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 확산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잠재적 적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 이번 보고서는 بار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19일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임.
- 미국 대통령은 핵 운용 전략을 수정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전략 이행 6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게 돼 있고,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됐음.
- 보고서는 냉전 이후 국제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며 세계 핵전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핵 공격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평가했음.
-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급박한 위험은 국제 테러조직의 핵 테러 가능성이며, 핵 확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음.
- 특히, 핵 확산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 추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을 미국과 동맹국, 동반국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 계속 두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핵 억제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 특히 동맹국과 동반국을 위해 핵무장 폭격기와 전투기를 전진배치할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 김계관 "6자 회담 등 대화 환영">(6/22,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1일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화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김계관 제1부상은 이날 양제츠 국무위원과 회동,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김 제1부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재차 밝히고 북중 간의 장기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양제츠 국무위원은 지난 19일 이뤄진 첫 북중 전략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중국은 북한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 그는 한반도 상황이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복잡하며 민감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음.
- 앞서 김 제1부상은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북한은 최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가 하면 제1차 북중 전략회의, 김계관 제1 부상과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주요외교인사 회동에서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46년 전 침몰 선박 재조사... 실종 선원 납북 의심>(6/20, 미국의 소리)

- 일본 정부가 46년 전 침몰한 선박을 인양해서 재조사하기로 했음. 실종 선원들이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기타무라 다카시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18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침몰 사건 재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선박을 인양할 방침임을 나타냈음.
- 침몰 선박은 오징어잡이 소형 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해 모두 4 명이 조업 중 실종
- 가족들은 실종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선원들이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도 있어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와 함께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해 왔음.
- 앞서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지난 7일 과거 해난 사고에 대해 납치 관련성이 있는지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오타 국토교통상은 북한이 일본인 선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음.
-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달 말 북한이 전담부대까지 편성해 한국과 일본 어민을 납치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전했다.
- 북한 군 간부로 납치 작전에 가담했었다는 이 탈북자는 북한이 지난 1962년에서 85년까지 원산 부근에 약 120 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해서 한국과 일본 어민을 납치하는 작전을 벌였다고 말했음.
- 지난 1962년에서 85년까지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는 모두 6만 9천 건에 이룸.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한 대화 재개 결정 환영">(6/17, 연합뉴스)

-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을 포함, 동결됐던 주변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음.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



레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6자회담 동결 해제를 포함, 새로운 (협상의) 동력을 부활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한 북한의 성명에 주목하고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간 연쇄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 루카셴비치 대변인은 그러나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찾을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여러 수준에 걸친 접촉은 지속되고 있으며 외무 당국 간 양자 접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같은 대화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 간 구체적 접촉 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과 러시아 외교가에서는 김 제1부상이 동맹국인 중국 방문에 이어 자국에 우호적인 러시아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김 제1부상의 방문은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핵감축 제안前 '한국에 핵우산 지속제공' 확인>(6/20, 연합뉴스)
 - 러시아에 핵무기 감축을 제안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전에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핵무기 감축과 한국에 대한 확장역지 제공은 별개'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는 각각 외교채널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제안에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역지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환영하면서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핵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역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앞으로 확장역지와 관련해 계속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략핵무기를 최대 3분의 1을 더 줄이자고 러시아에 제안했음.
- <미국 "유엔군 한국주둔·대북한 제재 계속될 것">(6/22, 연합뉴스)
 - 신선희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한국 내 유엔군 해체와 유



- 엔의 대북한 제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군 주둔과 미국의 제재 모두 지속될 것이라고 일축했음.
-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 대사의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 그는 "회견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알다시피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실제로 오랫동안 주둔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언제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벤트렐 부대변인은 "과거부터 익히 들어오던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

나. 한·중 관계

- <윤병세 "한중정상 합의문에 北비핵화 포함 예상">(6/1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에 대해 "우리는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한미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한미중 3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은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해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에 맞춘 딜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제의한 내용으로 보면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음.
 - 그는 "북미 간 2·29 합의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북한의 상황악화에 따른 '플러스 알파'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워싱턴에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우선순위와 관련,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잘 조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 <한중정상회담 의제는…北비핵화FTA·문화교류>(6/2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됨.
 - 특히,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지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외교 국가로 일본이



-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기 속에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풀이도 나옴.
-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 이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원칙적 수준을 뛰어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도출할 경우 북한 측에 주는 압박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결국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는 27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임.
 - 큰 틀에서 볼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경제 협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분야 문화 교류 등 3가지 주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비핵화 = 3대 핵심주제 중에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첫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불용 등 북핵 관련 이슈가 꼽힘.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이 확인됐음.
 -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여권의 한 인사는 "북핵의 현실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존재감의 확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불러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음.
 - 한중 정상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도 큼. 과거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확보(노무현 정부)', '9.19 공동성명 이행(이명박 정부)' 등의 문구가 포함됐음.
 -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간의 전략적 소통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중 정상의 목소리가 합의문에 담길지도 주목됨.
 - 박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측의 대북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탈북자 송환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됨.
 - 탈북자 송환문제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데다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옮겨진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송환된 것을 계기로 최근 폐막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어젠다로 언급된바 있음.
 - 다만 탈북자 문제는 북중 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박 대통



령이 언급을 하더라도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레토릭'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한중FTA 등 경제이슈 =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룸.
-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7일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간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한다는 미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ICT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MOU를 채택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특히 한중 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양국 정부 모두 두 정상이 FTA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한국이 필요 없다고 하면 통화스와프 중단">(6/21, 연합뉴스)

- 일본이 내달 3일 만기를 앞둔 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한국이 필요 없다고 할 경우 연장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회견에서 원·엔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한을 맞을 때까지 필요가 있다면 연장하겠지만, 한국측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본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 취재진이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양쪽이 득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또 취재진이 "일본측으로선 적극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일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뒤 한일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양상
- 산케이신문 보도 후 김종수 총재가 "일본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한다'고 했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이 다시 '한국측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 2005년부터 유지해온 한·일 통화스와프 30억 달러가 줄고 나면 한·일간에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만 남게 됨.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해외홍보 대폭 강화>(6/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조사기관과 자료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재정을 활용해 관련 대외홍보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 일본 정부 산하 '영토주권 내외홍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초안은 일본이 독도 및 센카쿠 관련 대외홍보 면에서 한국과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총력을 다해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제3국들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초안에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기관과 자료센터를 설립하고, 영어논문과 자료를 취급하는 민간 연구기관 웹사이트에 재정 등의 측면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음.
 - 또 독도 등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 연구자·지식인을 일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일본 연구진을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 국제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음.
 - 이와 함께 재외 일본인과 일본 기업을 통해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영문 매뉴얼(fact sheet)를 제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음.
 - 초안은 특히 독도와 관련해 영문으로 홍보할 때 "한국이 무력행사를 통한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호소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또 센카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일본의 영해에 공선(公船)을 침입시키는 등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현상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더불어 영토와 주권에 대한 학교 교재 기술을 충실히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음.
 - 전문가 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초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담당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아베 정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이 내용을 토대로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중국, 북한 대처 강경해졌다">(6/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예전보다 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과 해킹 문제에 대해 '통명스럽지만 솔직한(blunt)'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 시리아 내전에서 적극적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은 '쉬운 해법은 없다'



- 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이란의 중도와 대통령 당선은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는 뜻'으로 봤음.
-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 방영된 PBS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찰리 로즈 쇼'에서 45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협박성 발언에 대해 문제를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 발상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예전에는 중국은 북한의 의도를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했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무시했다"면서 "이제 중국은 북핵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흔쾌히 전략적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이 점차 국제적 현안에 더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호평했음.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3월 말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 북한의 주요 외환은행과 거래를 끊은 바 있음.
 - 그는 시 주석에 대해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시 주석은 꽤 빨리 중국 내부에서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는 예전의 몇몇 중국 지도자와 비교할 때 더 젊고, 더 단호하고, 더 굳건하고, 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고 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킹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미국의 '통명스립지만 솔직한'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에 조직적으로 해킹공격을 한다고 지적했으나 시 주석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아주 통명스립지만 동시에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중국 측은 이 문제가 미·중 관계의 근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그는 "중국 지도자가 '당신 주장이 맞다. 우리는 당신 물건을 훔쳤고 현장범으로 걸렸다고 털어놓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면서 "중국 측이 '우리는 매일 미국 애플사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외국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지만 중국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은 내가 일본 측과 만날 때 주요 대화내용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군과 관련 있는 해커가 최신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려고 애플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은 통상적인 첩보행위가 아니다. 그건 도둑질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미국 뉴저지주 상원 "일본 '위안부 범죄' 교육하라">(6/21,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주 상원이 2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SCR-124)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상하원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보유한 첫번째 주로 기록
 - 뉴저지주 상원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결의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 정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인 여성이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동원됐다"고 명시했음.
 - 위안부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임을 거듭 분명히 못박은 것임.
 - 결의는 또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0명 전원이 출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음. 앞서 뉴저지주 하원은 같은 내용으로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결의안을 지난 3월21일 만장일치로 가결
 - 이에 따라 뉴저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타운과 카운티, 주의회 상하원 등 4대 입법기관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됐음.
 -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팻팍) 타운 의회에서는 2010년, 버겐 카운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통과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과 지난 1월 뉴욕주 상원, 지난 3월 뉴저지주 하원, 4월 뉴욕주 하원, 5월 일리노이주 하원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임.
 - 다만 뉴욕주 상원에서 가결된 결의는 하원에서 문안이 변경되는 바람에 효력을 상실
 -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해 5월 팻팍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전이 노골화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자 이 결의를 추진하게 됐음.
 -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번 결의안은 전체적으로는 2007년 연방 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뉴저지주 의회가 별도로 하고 싶을 말을 추가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음.

- 연방 하원은 최근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6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의안을 강화한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 중임.

바. 미·러 관계

● <오바마-푸틴, 핵물질 통제·확산방지 협력 지속키로>(6/18,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핵물질 통제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이를 위해 미-러 양국은 미국이 옛 소련국가들의 핵무기 해체 지원과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92년 체결한 '넌-루가 프로그램' 관련 협정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G8 정상회의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넌-루가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미-러 관계가 건설적인 협력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는 "이 같은 태도는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미-러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넌-루가 프로그램은 1991년 옛 소련 붕괴 후 소련 소속국들이 핵무기,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기를 해체하고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재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넌-루가 프로그램'이란 명칭은 1991년 관련 법안 제정을 주도한 미국 전(前) 상원 의원 샘 넌(민주당)과 리처드 루가(공화당)의 이름에서 따온 것임.
- 미국과 러시아는 1992년 넌-루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핵무기의 안전한 운송, 저장, 폐기 및 확산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 미국은 넌-루가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국가들이 폐기하는 수천기의 핵탄두와 미사일, 화학무기 해체를 지원해왔음.
- 미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가 14일 핵물질의 보호, 통제,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규정한 새로운 양자 포괄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성명은 새 협정이 16일 효력이 끝난 기존 넌-루가 프로그램 관련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악관은 그러면서 "새 협정이 미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핵물질 비확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음.
- 협정을 갱신키로 했다는 소식에 넌 전 상원 의원은 "이 중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면 협정 이상의 방법들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환영



- <러, 오바마 추가 핵감축 제안에 펼쳐름한 반응>(6/2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추가 핵감축 제안에 펼쳐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 전 제안한 미-러 핵무기 추가 감축 제안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고려할 때만 가능하다"고 못박았음.
 -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의 반발을 불구하고 유럽에 MD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미-러 추가 핵감축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음.
 - 러시아는 나토가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에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미-러 국방력의) 전략적 균형에는 MD 시스템과 같은 방어 무기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략적 비(非)핵무기 등도 영향을 미친다"며 "러시아는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음.
 - 라브로프는 또 추가 핵협상을 미-러 양자 차원이 아니라 다른 핵보유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음.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하루 전 오바마 대통령의 핵감축 제안 직전 러시아의 핵전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 제안을 무색하게 했음.
 - 미하일 마르젤로프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미국과의 핵감축 논의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 핵무기의 3분의 1 정도를 추가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각각 1천654개와 1천480개의 전략 핵탄두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양국은 지난 2010년 4월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통해 실전배치 전략핵탄두를 1천550개, 장거리미사일 등의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러시아 외무 "미국 탓에 시리아평화회담 무산될 수도">(6/22,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모순적 신호가 시리아 내전 사태 종식을 위한 국제 평화회담 개최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지적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포럼에 참석해 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시리아 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도 반군으로 하여금 싸움을 계속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라브로프는 이어 서방의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사임 요구에



-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혔음.
- 그는 러시아가 아사드 사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사드 정권을 좋아하거나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시리아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아사드에게) 항복하라거나 우리에게 권력을 넘기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음.
 - 그는 또 미국과 프랑스·영국 등이 제시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도 믿을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아베총리 자문역 주초 방중...'센카쿠특사'역할 주목>(6/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분야 자문역인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 참여가 주초 비공개리에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음.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야치 참여가 이번 주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음.
 - 스가 장관은 야치 참여의 임무 등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채 "일본과 중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야치 참여는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열도 문제 때문에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중국 측 고위 인사와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음.
 - 야치 참여는 2005~2008년 직업 외교관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외무성내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을 역임했음.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작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아베 총리의 자문역인 내각관방 참여를 맡아왔음.
 -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워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때문에 야치 참여가 이번 방중기간 센카쿠 문제의 해법과 중일 정상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계의 복원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뜻을 전하는 특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옴.
 - 최근 중국 정부는 이달 7~8일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은 뒤로 미루는 이른바 '센카쿠 유보론'을 받아들일 것을 일본에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음.
 - 그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중국과 관련, "중국은 빈부차 확대 등 국내문제에 대한 불만의 배출구를 대외관계에 두려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아. 중·러 관계

- <푸틴 "중국에 600억 달러 규모 원유수출 합의">(6/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600억 달러 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 로 합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밝혔음.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한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부총리와 면담하면서 양국이 원유 수출과 관련한 10년 장기 계약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티'와 중국 사이에 유례 없는 대규모 계약이 준비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으로 6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수억 톤(t)의 원유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푸틴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 하지만 양국이 언제 원유수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이밖에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민간에너지 회사 '노바텍' 등도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티 회장은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연설에서 향후 25년 동안 3억6천500만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 계약의 거래액이 2천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음.
 - 러시아는 시베리아 유전지대와 나훗카 인근 코즈미노 항을 연결하는 길이 4천800km의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현재 ESPO의 지선인 스코보로디노-모허(헤이룽장성) 노선을 통해 연간 1천500만t 규모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 앞서 지난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양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중국 공급량을 향후 25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 합의에 따라 로스네프트는 중국에서 20억 달러의 차관을 받기로 했음.
 - 유럽 위주의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천연가스 공급협상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 이견으로 계약 체결에는 난항을 겪고 있음.

자. 기 타

● <시진핑 중국 주석 "유엔 공정·공평해야">(6/2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의 공정하고 공평한 역할을 주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19일 반 총장과의 회담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은 불편부당과 공정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한 태도로 발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중국은 이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앞으로 국제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음.
- 중국사회과학원의 국제관계전문가인 자오준제(趙俊杰)는 "중국은 유엔이 자국의 목소리와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중국·국제평화안보프로젝트 대표인 마티유 뒤샤텔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엔이 국제 문제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